

투데이 칼럼

국가유공자의 행복한 노후복지 프로젝트

6월은 현충일과 6.25전쟁 기념일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호국보훈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감사의 달, 호국보훈의 달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싸우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25전쟁의 포성이 멈춘지도 63년이 지나가고, 20대의 젊은 청년은 이제 80대가 되었다.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를 돕고자 노후복지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를 돕고자 노후복지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 보훈대상자의 인력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요양시설을 통한 시설보호, 여가활동지원 등 다양한 노후복지를 구현하고 있다.

이에 2007년부터 BOVIS(Bohun Visiting Service)정책을 추진한 이래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BOVIS는 Bohun Visiting Service의 약자로서 직접 찾아가서 제공하는 맞

춤형 종합서비스를 뜻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보훈가족에게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2007년 선포한 이래 노후복지의 든든한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동보훈복지서비스는 국가보훈의 최일선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노후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 및 유관기관 간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훈가족들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우리 전북동부보훈지청의 고령 저소득 재가복지서비스대상자는 400명으로 이분들을 위해 2명의 보훈복지사와 36명의 보훈심검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가사·간병 등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보훈심검사를 통한 재가복지서비스는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의 경우 주3회, 그 이외는 주 1~2회 유공자택을 방문하여 세탁, 청소, 말벗, 외출동행, 식사수발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주거환경개선, 말반찬서비스, 치매예방프로그램, 외식접대, 위안잔치, 이미용서비스, 장수사진, 나들이, 영화관람 등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으로 보훈가족 참여도와 만족도를 제고하였고, 행복한 노후·안전한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하시

는 어르신들은 너무 즐거워하시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흐뭇해 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된다.

또한 전북동부보훈지청에서는 정부3.0 민관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응답하라! 2016프랜드」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내 기업체, 지역봉사단체, 학교, 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지원에 통한 국가유공자의 행복추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가족에 대한 노후복지는 국민 모두의 막중한 의무이자 사명임의 기본도리라 생각하며, 이번 호국보훈의 달을 기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하루빨리 우리사회의 인식 전환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복지를 위한 후원에도 인색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을 기해 국가유공자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달이 되길 바란다.

김영남

전북동부보훈지청 복지팀장



독자제언

보복운전 근절 위해 배려와 의사소통 필요

최근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주행 중 차량을 급정거하거나 급차로 변경, 가로 막기 등 갑작스런 위험행위로 보복을 하는 보복운전 이 사회에서 크게 문제화 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이란 무엇인가? 보복운전이란 차선 변경을 하려는데 양보를 안 해주었거나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면, 매너 없는 끼어들기 등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진로를 방해하거나 뒤에서 차가 오는데도 급제동을 하는 것, 상대차량을 중앙분리대나 갓길로 밀어붙여 운전자에게 폭언 등 상대를 위협하는 형태를 말한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운전자는 안전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생명을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보복운전은 단순히 '욕' 해서 발생하는 실수가 아닌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자동차가 누군가를 보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 자동차는 위험한 흉기·물건이 되어 일반 형법보다 형이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적용되어 처벌된다.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의식과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운전습관이나 오해로 인하여 보복운전이 발생하는 만큼 운전자끼리 배려하는 마음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운전 중 자신의 시수로 상대방이 불쾌함을 나타내면 비상등을 잠시 깜빡이거나 손을 한 번 들어서 사과의 표시를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상하였다고 해도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모두 최소한의 운전 예절에 좋은 매너를 더한다면 보복운전은 근절되고 안전한 도로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윤근영

독자제언

6월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경찰에서는 노인학대근절 및 관심속구를 위해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날(6월15일)이 있는 6월 한달간 "노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노인학대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북전북지부의 노인학대의 연령별 통계에 따르면 60-64세 5.4%,65-69세 12.8%,70대 이상에서는18.5%에 이르는 학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학대도 증가하고 있다.

가정내에서의 학대가 8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배우자와의 갈등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학대가 이뤄졌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 처벌 받을까 걱정되시,혹은 보복이 두려워서,알려지는게 부끄러워서 신고보다는 혼자 참고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되풀이 되는 악순환만이 될뿐이다.

이러한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은 국민이 이웃과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가족간의 문제라고만 생각에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남몰래 "혼자만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노인 학대 피해자는 없는지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 이번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국민의 인식변화를 통하여 노인학대를 미리 예방하고 점검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래 본다.

배동규 원안경찰서 서회파출소팀장

사설

수도권 규제 폐지 말도 안된다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일을 내고 있다. 수도권에 10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나선 것이다. 그에 대하여 비수도권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문제가 심각하다. 수도권에 의식이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수도권에 의원들이 법률안 발의에 호응하고 나설 경우 큰 쟁점의 불꽃을 튀길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법안 발의는 말도 안된다. 그것은 수도권민의 독식을 말하는 것이니가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기업들의 비협조로 지방 경제가 죽을 수 있는 판이다. 수도권에 규제가 완전히 풀리게 되면 국토의 나머지 전체의 지역 경제는 고사되는 게 뻔한 수순이다. 수도권 여야 의원들의 뜻밖의 움직임에 비수도권은 한 방 맞은 기분이다. 저번에 전북도가 수도권에 규제 완화에 대한 서명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강력한 움직임이 예상된다. 그때 전북은 단시일내에 73만여명이 참여했고, 충북에서도 70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

로는 763만 5천여명이 서명했던 것이다.

각 지역이 현 정부의 규제완화 승인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현실은 이상한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였던 게 사실이다.수도권에 대한 규제 폐지 시도는 좌시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 그동안 서울과 경기도에서 규제가 부당하다며 풀어줄 것을 정부에 계속 요청했는데 그게 조금씩 먹혀들더니 지금에 이르고 있는 까닭이다. 그 먹혀들고 있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본래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국토의 고른 발전이 목적이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가 현 정부 들어서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측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거듭 말하고 있으나 오늘날의 실상은 그게 아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 폐지 움직임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 폐지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수도권의 배만 불러주는 결과를 초래할 게 뻔하다.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원안대로 가야 마땅하다.

장마철 피해 예방 대책 세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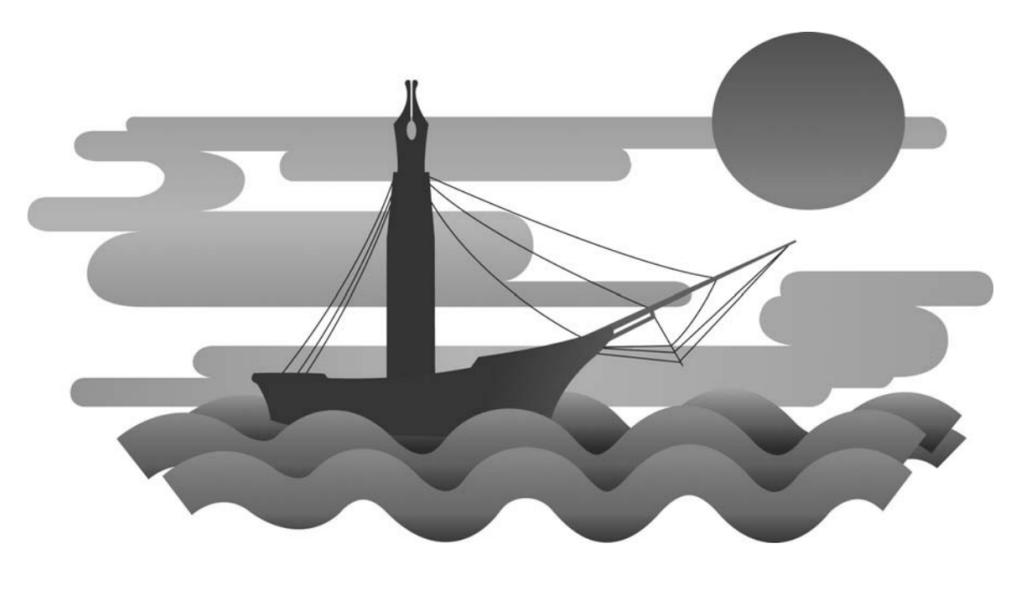
장마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다. 태평양에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한반도 남쪽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마라니까 어떤 이는 반색할 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가뭄이었니 판은 그럴 법도 하다. 그러나 장마가 늘 그렇듯 문제를 낙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장마가 물고 오는 비도 정도껏이어야지 과도하면 곤란하다. 지금부터 장마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장마철이 적당히 내려 저수지가 할 만큼 된다면서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러나 자연기후라는 게 사람의 입맛대로 움직여주는 것은 아니다. 만약의 경우를 미리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이야기이다. 지난날 장마와 관련한 자연재해의 태반은 대비 부족이 초래한 것이니 말이다. 그래서 다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자연재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지에 대한 예전의 조사 결과를 다시 상기해야겠다. 그 발표에 따르면 전북 지역이 당하는 피해 규모가 전국의 6%였다. 언뜻 생각해 감이 안 잡히는 내용이었었는데 돈으로 환산하니 그 규모가 어

마어마했다. 10년 동안의 피해액이 무려 1조2백89억 원이나 된다는 거였다.

장마 피해 방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전북은 경제적으로 가난이 든든한 고장이 아니다. 자체적으로 돈을 조달할 능력이 약한 것이다. 그런데도 자연 재해 때문에 큰 손실을 반복해 당한다면 달리 생각해야 한다. 현 정부가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세웠는데 전북도는 그걸 잘 활용해야겠다. 전문 학적인 돈이 자연재해 때문에 허비되고 있음은 많이 아쉬운 일이다.

전북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장마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전라북도'라는 말도 생겨났다. 그래도 자연기후는 온전히 믿을 게 못된다. 그러므로 만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 빠른 공사와 장비보강이 소망스럽다. 장마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작업을 통해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실제 장마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복구를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가기 마련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